

지방선거와 현직효과*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The Incumbency Advantage in the 2010 Local Elections in Korea

황 아 란**

Hwang, Ah-Ran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가설 및 분석 자료
- IV.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분석결과
- V. 결 론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의 정당 영향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현직의 후보요인에 중점을 두고 지방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이 2010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 선거과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직의 이점이 공직을 달리하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현직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 역시 당선이나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선거보다 크며, 지방의원선거 중에 기초가 광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후자는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정당이나 지역, 도시유형에 따른 차이도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 인지수준이 현직효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 주제어: 현직효과, 지방선거, 정당지지, 인지효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2S1A5A2A01019819).

**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2. 9. 5, 심사기간(1,2차): 2012. 9. 6 ~ 2012. 11. 20, 게재확정일: 2012. 11. 20

It i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influences of national politics and regional party supports are quite strong in the local elections. Focusing an incumbency advantage which is a local and short-term factor, this study analyzes its impact on the electoral outcomes with the aggregate data of the 2010 concurrent local elections. It shows that the party factor is quite strong, but the candidate factor of incumbency also has an important effect on candidates' winning as well as their vote rates. The incumbency effect is much stronger in the mayor election than the local council member one. Among the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s, its effect is stronger in the lower-level than the higher-level. The result confirms incumbent candidates enjoy the recognition effect of their names.

□ Keywords: incumbency advantage, local election, party support, recognition effect

I. 서론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의 영향이 매우 큰 특징을 보여 왔다. 2010년 6·2 지방선거 역시 지역의 현안보다는 중앙정치의 이슈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론이 주요 선거쟁점으로 주목받았다. 중앙정치의 정당 요인이 지방선거에 미친 강한 영향은 정당후보의 당선율이나 지역별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에서 잘 나타나며,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여당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방선거이지만 중앙 중심의 행사로 치러지는 이러한 특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란 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 차원의 정당 요인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방 수준의 현직과 같은 후보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며, 이는 지방의 고유한 정치영역이 중앙에 의해 크게 침해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여·야 정당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현상은 50%를 훌쩍 넘는 현직의 교체율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선거의 통제기능이 지방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점은 지방자치 운용에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공직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저해되어 지방자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한계도 내포한다.

현직의 높은 교체율은 공직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현직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부족하여 정당 요인에 좌우된 투표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전자는 회고적 평가에 의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현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표라면, 후자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여·야 소속정당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직효과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제한적이고 미흡하다고 본다.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 간의 현직효과가 다를 수 있고, 광역과 기초 수준 간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현직효과에 주목하였으나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국회의원선거에 치중된 관심을 보였으며,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극히 일부 연구도 광역단체장(이관수·김영중, 2010)이나 기초단체장 선거(황아란, 1999)에 국한된 분석이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현직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2010년 지방선거의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의 현직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우선 동시실시의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달리하는 각급 선거의 현직효과를 비교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 클 것이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인지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선거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현직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직의 인지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의 영향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지방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공직선거에서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는 현직후보가 비현직보다 당선율이나 득표율 또는 당선경쟁에서 앞선다는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 되어 왔다. 하나는 직접적인 효과로서 현직자가 지닌 이점을 들 수 있다. 현직자는 선거구 주민과의 접촉이나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지역구 사업을 통한 자원 분배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쉽기 때문에 이전 선거보다 유리한 선거환경에서 출마할 수 있으며(Yiannakis, 1981; Fiorina, 1989), 의정활동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기회가 많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지명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Mahyew, 1974; Lyons and Galderisi, 1995). 또한 현직

자는 이전 선거에 참여한 경험 때문에 비현직 도전자보다 유권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Mann, 1978; Jacobson, 1980; Caldeira and Patterson, 1982; Box-Steffensmeier et al., 2003), 반복된 선거경험으로 선거운동 자금이나 조직 등 선거자원을 상대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Jacobson, 1980, 1987; Kazee, 1983; Goidel and Gross, 1994; Cox and Katz, 1996; Lewitt and Wolfram, 1997; Campbell, 2003; Abramowitz et al., 2006).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효과로서 잠재적인 강력한 도전자후보를 배제시키는 효과(scare-off effect)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직후보의 강점들이 잠재적인 도전자후보에게 두려움을 주어 현직자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인데, 특히 풍부한 경험과 선거자원을 지닌 강력한 도전자후보일수록 위험성이 높은 현직선거구보다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현직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자후보와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Jacobson, 1980, 1989; Banks and Kiewiet, 1989; Cox and Katz, 1996; Stone et al., 2004; Gordon et al., 2007; Ashworth and Bueno de Mesquita, 2008).

종합하면 현직후보가 지닌 다양한 이점들은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도전자후보들을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지닌다. 현직후보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무엇보다 유권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인데, 현직자의 이름은 유권자에게 친숙하고 공직을 경험한 현직후보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라 여길 수 있다 (Jacobson, 1987; Quattrone and Tversky, 1988).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현직의 인지효과(recognition effect)는 인지의 편의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Stokes and Miller, 1966), 현직후보의 득표율 향상과 재선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Mann, 1978).

2. 현직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현직후보가 비현직보다 선거경쟁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에서 널리 입증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 선거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 갑자기 상승한 현직후보의 경쟁력에 대해 처음 주목한 이래(Erikson, 1971; Mayhew, 1974),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측정 방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직효과의 크기와 증가 현상을 분석해 왔다. 현직의 강한 영향력은 현직의원의 재선율이 90%를 훨씬 넘는 미국 연방의회 선거뿐 아니라 주의회나 시의회 선거에서도 다른 어떤 변수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

그에 비하여 한국에서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직의 이점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였다. 즉 선거경쟁에서 현역의원이 유리하다는 주장(박찬

욱, 1993; 황아란, 1998; 이갑윤·이현우, 2000; 윤종빈, 2002)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남영, 1996; 김도중·김형준, 2000)으로 나뉜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관심이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지만(임성학, 2005; 윤종빈, 2006, 2010;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9), 미국에서와 같은 강력한 현직의 이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선거에서 현직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며(한정택, 2007; 황아란, 2008),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의 현직 재선율은 17대 총선까지 60% 안팎 수준이었고 가장 높았던 18대 총선에서 거의 70%에 달하였으나, 18대 총선에 이어 19대 총선에서 현직을 유지한 의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지역구 활동이나 높은 인지도, 선거운동 자원 등의 우월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직효과가 낮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높은 불신으로 인하여 세대교체의 '물갈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선거 환경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인한 정당중심의 투표선택이 후보요인의 현직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일 수 있다. 정당의 재공천이나 당직변경 여부가 현직의원의 재출마와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은 정당의 영향이 지배적인 한국선거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이갑윤·이현우, 2000; 황아란, 2008).

지금까지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선거에 집중된 관심을 보인 반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체장선거에 국한된 것이었다. 황아란(1999)은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를 검증하면서 무소속보다 정당소속의 현직후보 재선율이 높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았다는 점을 들어 현직후보의 인지효과를 주장하였으며, 이근수·김영중(2010)도 2010년 광역단체장선거에 대한 현직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당요인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사실 국회의원에 못지않은 단체장의 인지도나 지명도를 고려할 때 단체장선거에서의 현직효과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특히 중앙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관심과 동시실시로 인한 후보인지의 어려움 속에서 현직 단체장의 인지효과는 더 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선거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지방의원선거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직의 인지효과를 고려할 때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 간의 현직효과가 다를 것이고, 광역과 기초 수준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방선거는 특히 동일한 시점에 공직을 달리하는 여러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급 선거에 미치는 현직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와 정당의 영향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현직후보의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지방적인 행사'로서 의미를 지니는가를 조명해 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Ⅲ. 연구가설 및 분석 자료

1. 연구의 분석 틀 및 가설

본 연구는 현직의 인지효과에 기초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수준은 현직효과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현직후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현직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현직후보에 대한 정보획득 비용은 비현직 후보들보다 낮은 인지적 이점이 현직효과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주의 정당지지나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등 정당 요인은 유권자의 선거관심이 낮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직후보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을 때 투표선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인지효과는 각급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후보에 대한 정보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수준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선거환경 변수를 분석의 틀로 삼아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선거 연구에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 인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선거유형과 소속정당, 지역주의, 도시화 수준 등을 중심으로 현직효과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현직의 인지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동시실시는 보름 남짓한 선거기간 동안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 쏠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공직의 권한이나 지명도 면에서 단체장이 지방의원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직효과는 보다 가시성이 높은 공직에서 크며, 비중이 덜한 공직은 임기 중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현직자의 이름이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Ansolabehere and Snyder, 2002). 따라서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현직효과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광역과 기초 수준에서도 현직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기초보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직의 비중이나 지명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후자의 현직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실시의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의원선거의 경우는 오히려 주민과의 근접성 측면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광역의원보다 높을 수 있어 전자의 현직효과가 더 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의 지배적인 영향과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심판이 강한 지방선거에서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보다 주요 정당, 특히 여당보다 야당이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황아란, 2010a), 현직효과는 정당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직효과가 정당 요인보다 강한 경우라면 군소정당/무소속의 현직후보가 주요 정당의 비현직보다, 그리고 여·야 간에는 현직 여당후보가 비현직의 야당후보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경쟁으로 구조화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중심의 선거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요 정당소속의 후보들이 군소정당/무소속보다 인지도가 높으며(황아란, 1999, 2006), 이는 현직보다 비현직 후보의 경우에 인지도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소속정당을 통제할 때 현직과 비현직 후보의 차이는 주요 정당의 후보보다 군소정당/무소속의 경우에 더 클 것이다.

셋째, 유권자의 정당태도는 선거관심과 투표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지 정당이 있는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준이 높으며(황아란 2010b, 2011), 현직이든 비현직이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역주의 정당지지 지역에서 특정 정당후보의 당선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직과 비현직의 차이는 소속정당의 지지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도시화 수준이 선거관심과 후보인지에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은 투표율의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이나 기초의원선거의 기호효과 등에서 널리 입증된 사실이다(김육, 1999; 정준표, 2007; 황아란, 2010b, 2011). 도시화 효과는 인구가 적을수록 공동체의 동질성과 결속력이 강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깊기 때문으로, 현직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수준 역시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을 수 있다(황아란 1999). 즉 현직효과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클 것이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결과의 후보자 데이터이다. 본 분석에서 현직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공직으로 당선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2010년 후보 가운데 사정에 의해 현직에 있지 않은 2006년 당선자도 현직후보의 대상에 포함하였다.¹⁾ 그런 경우 ‘현직’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문제를 지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현직후보라 총칭하고자 한다. 한편 2006년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 후보 인지도는 일반적으로 선거과정과 당선을 통해 높아진다는 볼 때 2006년 당선된 경력을 지니고 2010년 동일한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이러한 현직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2010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경우는 현직후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의 지명도나 인지도는 신인 후보에 비하여 높을 수도 있으나, 현직의 이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전 선거과정에서의 참여 경험과 선거구 유권자의 집착을 비롯한 지역사업의 추진, 민원해결 등 지역구 업적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2010년 현직후보는 총 2003명으로 전체 후보의 24%를 차지한다. 각급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11명(20%), 기초단체장 후보 중 138명(18%),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중 320명(18%),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중 1534명(26%)이 현직후보로 출마하였다.

현직효과의 분석방법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과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을 비교한 후, 이를 후보의 소속 정당별, 지역별, 도시화 수준별로 나누어 현직후보의 당선율과 비현직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당락에 중점을 두어 현직효과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것은 현직의 재당선이 선거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이며, 선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두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현직효과와 같은 탐색적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직의 당선확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종합적인 회귀모형 분석에서는 당락뿐 아니라 득표율에 미치는 현직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만 광역단체장선거는 사례수가 적은 한계로 인하여 빈도분석 중심으로 현직효과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IV.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분석결과

1. 현직효과의 기초 분석

전체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의 당선율(58%)은 비현직 후보보다 22%p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1>참조). 그러나 유의할 점은 현직후보가 비현직보다 당선율이 높지만, 현직을 계속 유지한 지방정치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0년 현직 당선자(1161명)는 전체 당선자의 34%에 불과하여 교체율이 2/3에 달하였다. 특히 지역구 광역의원의 구성은 무려 75%가 새롭게 교체되었고, 광역단체장은 50%,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은 각각 64%가 바뀌었다.²⁾ 이렇듯 높은 교체율은 지방선거의 현직효과가 높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각급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보다,

2) 높은 교체율은 현직자의 재출마율이 매우 저조했던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초의원이 광역의원보다 교체율이 낮은 것은 현직효과의 상대적인 영향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1> 2010년 각급 지방선거와 당선율의 현직효과

	현직	비현직	차이	통계량(χ^2)
전체	58.0% (1161명)	35.6 (2275)	22.4%p	314.8***
광역단체장	72.7 (8)	18.2 (8)	54.5	12.7**
기초단체장	59.4 (82)	23.9 (146)	35.5	67.1***
광역의원	51.6 (165)	35.7 (515)	15.9	27.9***
기초의원	59.1 (906)	37.5 (1606)	21.6	215.0***

*** $p < .001$ ** $p < .01$

(괄호) 안은 당선 인원수

현직의 당선율이 비현직보다 높은 것은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선거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현직의 인지효과에서 예상한 대로 지방의원보다 단체장의 현직효과가 더 강하다. 광역단체장의 현직후보 당선율(73%)은 기초단체장(59%)보다 높을 뿐 아니라 비현직 후보와의 당선율 차이도 광역(55%p)이 기초(36%p)보다 크다. 반대로 기초의원 현직후보의 당선율(59%)은 광역(52%)보다 높으며, 비현직 후보와의 차이도 기초(22%p)가 광역(16%p)보다 크다. 광역과 기초의 이러한 차이는 단체장선거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원선거의 경우는 근접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이 단체장선거보다 지방의원선거에서 높다는 것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후보요인보다 정당의 영향이 강한 지방의원선거의 특징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을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당선자의 소속정당은 전체 3436명 가운데 한나라당 42%, 민주당 38%, 군소정당 10%, 무소속 11% 분포로,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주요 정당이 지배적인 특징과 한나라당 당선자 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발견할 수 있다.³⁾ 이는 주요 정당뿐 아니라 여·야 소속 역시 당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데,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던 2006년과 달리 2010년에는 집권당으로서 많은 의석을 잃었던 것이다.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선거의 심판적

3) 2006년 지방선거의 당선자 분포는 총 3414명 중 한나라당 61%, 열린우리당 17%, 민주당 10%, 군소정당 4%, 무소속 8%였다.

성격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현직효과에서도 잘 나타나며, 한나라당의 현직후보는 9명 가운데 6명이 당선되었으나 비현직 후보는 6명 모두 낙선한 반면, 민주당의 현직후보 2명은 모두 당선되고 비현직 후보는 11명 가운데 5명이 당선되었다. 참고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27명)은 모두 비현직으로 출마하여 3명이 당선되었다.

〈표 2〉 소속정당과 당선율의 현직효과

		현직	비현직	차이	통계량(χ^2)
기초 단체장	한나라당	63.2% (43명)	31.5 (39)	31.7%p	18.1***
	민주당	91.3 (21)	54.6 (71)	36.7	11.0***
	군소정당/무소속	38.3 (18)	10.1 (36)	28.2	28.6***
광역 의원	한나라당	52.7 (107)	39.3 (145)	13.4	9.6**
	민주당	88.4 (38)	71.3 (290)	17.1	5.8*
	군소정당/무소속	27.0 (20)	11.9 (80)	15.1	12.9***
기초 의원	한나라당	59.7 (417)	55.7 (670)	4.0	2.8†
	민주당	79.7 (311)	62.6 (560)	17.1	36.7***
	군소정당/무소속	40.0 (178)	17.2 (376)	22.8	116.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괄호) 안은 당선 인원수

정당소속의 중요성과 현직효과의 영향력은 〈표 2〉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의 정당소속별 현직과 비현직의 당선율에서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크기는 선거유형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직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가장 컸으며, 한나라당 현직 후보(63%)가 민주당 비현직(55%)보다, 그리고 군소정당/무소속 현직(38%)이 한나라당 비현직(32%)보다 높은 당선율에서 잘 나타난다. 소속정당의 영향은 광역의원선거에서 강한 특징을 보이며, 한나라당 현직(53%)보다 민주당 비현직(71%)이, 그리고 군소정당/무소속 현직(27%)보다 한나라당 비현직(39%)의 당선율이 높아 현직효과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기초의원선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선거보다 민주당의 당선율이 감소하고, 한나라당과 군소정당/무소속의 당선율이 증가한 것은 중간 평가적인 정당요인의

영향이 덜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각급 선거결과에서 영·호남의 정당 분포는 현직의 이점과 함께 배타적 지역주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⁴⁾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의 5개 시·도 가운데 4명의 현직후보가 모두 승리하였으나, 비현직 후보로 출마한 경남에서는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다른 지역은 5명의 현직후보가 출마하여 두 곳(서울,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비현직이 출마한 5개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2명의 현직이 모두 당선되고, 비현직 후보로 출마한 광주에서도 승리한 데 비하여, 다른 지역은 비현직이 출마한 10개 시·도 중 네 곳(인천, 강원, 충북, 충남)에서 승리하였다.

지역주의의 영향은 <표 3> 상단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에서도 뚜렷한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의 현직 효과가 선거유형과 지지지역 여부에 따라 달랐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직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현직과 비현직의 당선율 차이가 영남(22%p)보다 기타 지역(30%p)에서 컸다. 광역의원선거는 한나라당만 기타 지역에서 현직과 비현직의 당선율 차이(10%p)가 유의할 뿐이며, 그 차이도 기초단체장선거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어서 현직의 후보요인보다 정당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기초의원선거는 한나라당의 영남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비현직보다 현직의 높은 당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그 차이(호남 20%p, 기타 15%p)가 컸다.

끝으로 자치구, 시, 군 등 도시화 수준에 따라 각급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를 <표 3>의 하단에서 살펴보면, 도시화 수준이 낮은 군에서 현직의 당선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치구에서 가장 낮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는 현직 기초의원의 당선율만이 겨우 50%를 넘을 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은 50%도 채 되지 못하였다. 또한 도시화 수준을 통제할 때, 단체장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특히 현직과 비현직의 당선율 차이에서 자치구, 시, 군 모두 일관되게 성립하였다. 다만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의 현직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자치구를 제외하고 성립하였는데, 자치구는 광역의원(9%p)이나 기초의원(7%p) 모두 현직효과가 매우 낮았던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4) 기초단체장은 영남에서 총 70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각각 70%, 26%, 호남은 총 41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78%, 22%였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영남의 총 188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각각 81%, 10%, 호남은 총 104명 중 92%가 민주당이었다. 기초의원은 영남에서 총 776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각각 63%, 21%, 호남은 총 443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이 70%, 22%였다.

<표 3> 지역주의 및 도시화 수준과 당선율의 현직효과

				현직	비현직	차이	통계량(χ^2)
지역주의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영남	83.3% (25명)	61.5 (24)	21.8%p	3.9*
			기타	47.4 (18)	17.7 (15)	29.7	11.8***
		민주당	호남	90.0 (18)	66.7 (14)	23.3	3.3†
			기타	100.0 (3)	52.3 (57)	47.7	n.s.
	광역의원	한나라당	영남	86.7 (65)	77.7 (87)	9.0	n.s.
			기타	32.8 (42)	22.6 (58)	10.2	4.7*
		민주당	호남	88.6 (31)	94.2 (65)	-5.6	n.s.
			기타	87.5 (7)	66.6 (225)	20.9	n.s.
	기초의원	한나라당	영남	61.8 (191)	64.8 (295)	-3.0	n.s.
			기타	58.0 (226)	50.2 (375)	7.8	6.2*
		민주당	호남	82.1 (147)	62.1 (162)	20.0	20.4***
			기타	77.7 (164)	62.8 (398)	14.9	15.9***
도시화 수준	기초단체장	자치구		48.8% (21명)	27.1 (48)	21.7%p	7.6**
		시		57.5 (27)	21.5 (46)	36.0	24.7***
		군		70.8 (34)	23.6 (52)	47.2	40.3***
	광역의원	자치구		45.5 (50)	36.5 (191)	9.0	3.1†
		시		54.0 (68)	35.8 (230)	18.2	14.6***
		군		56.0 (47)	33.7 (94)	22.3	13.5***
	기초의원	자치구		51.6 (245)	44.9 (601)	6.7	6.3**
		시		61.5 (405)	33.7 (635)	27.8	155.1***
		군		64.0 (256)	34.7 (370)	29.3	102.3***

*** $p < .001$ ** $p < .01$ * $p < .05$ † $p < .1$

(괄호) 안은 당선 인원수

2. 현직효과의 종합분석

다음은 출마 후보의 소속정당과 지지지역, 도시화 수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선거의 현직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후보의 당락과 득표율이며, 각각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OLS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현직효과를 살펴볼 것이다.⁵⁾ 독립변수는 현직 여부(현직D)를 비롯하여 소속정당(한나라당D, 민주당D), 정당 지지지역의 출마 여부(지지지역D), 도시화 수준(자치구D, 군D), 후보수,⁶⁾ 학력, 연령, 성별 등이 포함된다. 정당 지지지역의 출마여부는 한나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한 경우나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한 경우, 국민중심당 후보가 충청에 출마한 경우에 지지지역D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조작화 하였다. 도시화 수준은 일반시를 기준 삼아 자치구와 군으로 구분하고, 학력은 초졸 미만(1)부터 대학원졸(7)까지, 그리고 성별은 여성 '0', 남성 '1'로 측정하였다.

한편 현직과 다른 변수의 교차효과는 주요 정당 소속의 현직효과(현직D*한나라당D, 현직D*민주당D), 지지지역의 현직효과(현직D*지지지역D), 도시화 수준의 현직효과(현직D*자치구D, 현직D*군D)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참고로 현직과 주요 정당 소속의 교차변수들은 음의 부호를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정당 변수를 통제할 경우 현직효과가 주요 정당보다 군소정당/무소속 후보의 경우에 더 클 것이란 가설에 따른 것이다. 또 지지지역을 통제할 경우 소속정당의 지지지역보다 기타지역에서 현직효과가 더 클 것이란 가설에 기초한다. 끝으로 도시화 수준의 현직효과는 도시화수준이 낮을수록 클 것이란 가설에 따라 현직과 자치구의 교차효과는 음의 부호로, 현직과 군의 교차효과는 양의 기호를 예상한다.

전체적으로 <표 4>의 당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직여부와 소속정당, 지지지역, 후보수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p < .05$). 현직여부는 특히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에 버금가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확률은 군소정당/무소속에 비하여 9.4배 높아 한나라당 후보의 2.3배보다 훨씬 큰 데, 현직의 효과 역시 비현직 후보보다 당선확률이 8.3배 높았다. 또한 지역적 정당지지의 편향을 보여주는 지지지역 변수 역시 소속정당의 지지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당선확률이 5.6배 높지만 현직효과보다는 약한 것이었다.

5) 무투표 당선자는 당락 분석에는 포함되지만 득표율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무투표 당선자 중 현직은 기초단체장 8명 중 7명, 광역의원 44명 중 22명, 기초의원 16명 중 7명이었다.

6)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 기초의원선거의 당락 분석은 후보수 대신 후보경쟁률로 조작화 하였다.

〈표 4〉 2010년 지방선거 당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	-1.59 (1.25)		-1.72* (0.68)		0.17 (0.31)	
현직D	2.12*** (0.48)	8.32	1.30*** (0.38)	3.66	1.41*** (0.14)	4.09
한나라당D	0.84** (0.29)	2.32	0.98*** (0.18)	2.66	1.56*** (0.09)	4.76
민주당D	2.24*** (0.27)	9.37	2.94*** (0.18)	18.90	1.94*** (0.09)	6.94
지지지역D	1.71*** (0.30)	5.56	2.43*** (0.20)	11.40	0.51*** (0.09)	1.66
자치구D	0.16 (0.28)	1.17	0.03 (0.16)	1.03	0.20* (0.08)	1.23
군D	0.30 (0.28)	1.35	0.09 (0.21)	1.10	0.20* (0.09)	1.22
현직D*한나라당D	-0.24 (0.53)	0.79	-0.56 (0.39)	0.57	-0.91*** (0.16)	0.40
현직D*민주당D	-0.52 (0.92)	0.60	-1.68** (0.64)	0.19	-0.24 (0.19)	0.79
현직D*지지지역D	-0.33 (0.57)	0.72	0.13 (0.39)	1.14	-0.33* (0.16)	0.72
현직D*자치구D	-0.94† (0.56)	0.39	-0.64† (0.37)	0.53	-0.78*** (0.15)	0.46
현직D*군D	-0.45 (0.58)	0.64	-0.33 (0.42)	0.72	0.002 (0.17)	1.00
후보 경쟁률	-0.25** (0.08)	0.78	-0.36*** (0.07)	0.70	-0.52*** (0.05)	0.59
학력	0.14 (0.09)	1.15	0.11* (0.05)	1.11	0.10*** (0.02)	1.10
연령	-0.01 (0.01)	0.99	-0.004 (0.01)	1.00	-0.02*** (0.004)	0.99
남성D	-0.10 (0.58)	0.90	0.06 (0.22)	1.06	-0.24* (0.10)	0.78
사례수	749		1764		5822	
-2Log L	920.60		2352.07		7961.28	
우도비 X ²	252.64***		782.07***		1456.44***	
적중률	84.3		86.5		77.7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참고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직과 다른 변수들(정당, 지지지역, 도시화 수준)과의 교차 효과는 음의 후보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현직과 자치구의 교차효과(-0.94)가 $p < .1$ 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이는 예상대로 자치구에서 현직의 인지효과가 더 낮고 비현직과의 당선률 차이도 더 적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광역의원선거는 현직효과가 낮은 대신 정당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현직후보는 비현직보다 당선확률이 높지만(3.7배), 민주당 소속(18.9배)이나 지역주의(11.4배) 효과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소속의 당선확률(2.7배)이 민주당보다 크게 낮은 것은 여당 심판의 중간 평가적인 지방선거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런데 현직과 정당의 교차변수로서 민주당 소속(-1.68)은 현직 여부에 따른 당선확률의 차이가 군소정당/무소속보다 더 적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당보다 군소정당/무소속의 현직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광역의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보다 당선확률이 월등히 높지만 그 차이는 비현직 후보들보다 현직 후보들 사이에서 더 적다는 것이다. 현직과 자치구의 교차효과(-0.64)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와 같이 현직 여부의 당선률 차이가 자치구에서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p < .1$). 끝으로 사회경제학적 변수 중에는 학력이 광역의원후보의 당선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의 현직효과는 광역의원선거보다 약간 높아져 현직후보의 당선확률이 비현직보다 4.1배 큰 데 비하여, 정당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확률은 군소정당/무소속보다 높지만(6.9배), 한나라당 후보(4.8배)와의 차이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에서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지지지역의 영향력 역시 다른 두 선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소속정당의 지지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선확률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1.7배 높은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초의원선거에서 현직의 교차효과(정당, 지지지역, 도시)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현직과 정당의 교차효과는 한나라당 소속(-0.91)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현직 여부에 따른 당선확률의 차이가 한나라당보다 군소정당/무소속 후보의 경우에 더 크다. 현직과 지지지역의 교차효과(-0.33)는 지지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현직과 자치구의 교차효과(-0.78)는 이러한 차이가 특히 자치구에서 더 적다는 것을 뜻한다. 끝으로 사회경제학적 변수는 기초의원선거에서 모두 유의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당선확률이 높게 나타난다.⁷⁾

한편 <표 5>의 후보 득표율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선거 모두 공통적으로 현직여부와 소속정당, 지지지역, 후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5$),

7)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는 9.5%에 불과하였지만, 실제 여성후보의 당선율(49.5%)은 남성(42.5%)보다 높았다($X^2 = 10.7$ $p < .01$).

현직과 정당 교차변수들은 유의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2010년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상수	29.51*** (5.62)		48.87*** (2.50)		27.09*** (0.92)	
현직D	17.13*** (2.59)	0.34	7.30*** (1.52)	0.16	5.66*** (0.45)	0.25
한나라당D	14.56*** (1.43)	0.33	12.15*** (0.69)	0.33	6.31*** (0.28)	0.29
민주당D	18.39*** (1.37)	0.39	19.30*** (0.66)	0.49	8.72*** (0.29)	0.36
지지지역D	10.46*** (1.62)	0.21	9.53*** (0.78)	0.22	1.57*** (0.29)	0.07
자치구D	0.10 (1.33)	0.002	0.04 (0.60)	0.00	0.16 (0.26)	0.01
군D	1.17 (1.29)	0.03	1.36* (0.75)	0.03	1.05*** (0.28)	0.05
현직D*한나라당D	-7.89** (3.04)	-0.11	-2.75* (1.58)	-0.05	-3.22*** (0.53)	-0.10
현직D*민주당D	-10.42* (4.19)	-0.09	-5.02* (2.36)	-0.04	-0.83 (0.59)	-0.02
현직D*지지지역D	0.08 (3.25)	0.001	0.04 (1.54)	0.00	-1.85*** (0.51)	-0.05
현직D*자치구D	-2.71 (3.09)	-0.03	-2.65* (1.49)	-0.04	-1.42** (0.50)	-0.04
현직D*군D	-3.45 (3.15)	-0.04	-2.48 (1.68)	-0.03	-1.35* (0.53)	-0.03
후보수	-5.15*** (0.40)	-0.34	-8.17*** (0.27)	-0.45	-2.16*** (0.04)	-0.50
학력	0.67 (0.41)	0.04	0.52** (0.20)	0.04	0.47*** (0.07)	0.07
연령	0.05 (0.07)	0.02	-0.03 (0.03)	-0.01	-0.04*** (0.01)	-0.03
남성D	1.54 (2.63)	0.01	-0.52 (0.87)	-0.01	-0.99** (0.33)	-0.03
사례수	741		1720		5806	
F값	60.95***		214.42***		389.22***	
R ²	0.558		0.654		0.502	
Adj R ²	0.549		0.651		0.501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첫째 현직의 영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월등히 크며 민주당 소속 여부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을 보인다. 한나라당 후보는 군소정당/무소속보다 득표율이 15% 높고, 민주당은 18% 높는데, 현직여부에 따른 득표율 차이도 17%에 달한다. 또 지역주의 효과 역시 소속정당의 지지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이 10% 높지만 현직효과보다는 약한 것이다. 한편 현직과 정당의 교차효과는 현직여부에 따른 득표율 차이가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군소정당/무소속보다 8%, 민주당은 10% 적게 나타남으로써 군소정당/무소속의 현직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현직후보 경우 소속정당에 따른 득표율 차이가 비현직보다 적다는 점에서 소속정당의 영향이 현직후보에게 더 약하다(혹은 비현직 후보에게 더 강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광역의원선거는 기초단체장선거보다 현직효과가 크게 줄어든 대신 정당 요인은 소속정당과 지역주의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에 따른 득표율 차이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현직후보의 득표율은 비현직보다 7% 정도 높은 데 비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는 군소정당/무소속보다 각각 12%, 19% 높다. 지지지역의 회귀계수(9.53)는 지역주의 정당지지 편향이 기초단체장선거와 유사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현직과 정당의 교차변수들은 현직여부에 따른 득표율의 차이가 민주당 후보의 경우 군소정당/무소속보다 5% 적으며($p < .05$), 한나라당은 3% 적은 차이를 보임으로써($p < .1$) 군소정당/무소속의 현직효과가 더 크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장선거 비교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현직과 자치구의 교차효과(-2.65)는 현직 여부의 득표율 차이가 자치구에서 더 적다는 것으로($p < .1$), 현직의 이점이 대도시에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경제학적 변수 중에는 학력만이 통계적으로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의 현직효과(6%)는 광역의원선거와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하여 정당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은 군소정당/무소속보다 각각 9%, 6% 높으며, 지역주의 효과도 2%에 불과하여 앞서 당락분석과 같이 기초단체장선거나 광역의원선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직과 정당의 교차효과도 현직여부에 따른 득표율 차이가 한나라당 후보(-3.22)의 경우 군소정당/무소속보다 적어 군소정당/무소속의 현직효과가 더 크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장선거와 비교해서는 광역의원선거처럼 상당히 약한 것이다. 또 현직과 지지지역의 교차효과(-1.85)는 현직여부의 득표율 차이가 지지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크며, 현직과 도시화 수준의 교차변수는 일반시와 비교하여 현직과 비현직의 차이가 자치구(-1.42)뿐 아니라 군(-1.35)에서도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당락의 기초분석 결과와 달리 소속 정당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군의원의 현직효과가 낮다는 것인데,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다른 선거에서도 현직과 도시화 수준의 교차변수가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인지의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선거관심이 낮은 자치구의 경우 (비현직뿐 아니라) 현직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가 낮아 현직효과가 적은 반면, 선거관심이 높은 군에서는 (현직뿐 아니라) 비현직 후보에 대한 인지 역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직효과가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는 당락의 분석결과와 같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직의 인지효과에 기초하여 2010년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치의 지배적인 정당 영향 속에 가려진 지방적이고 단기적인 후보요인에 주목하여 지방선거 과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현직의 이점이 공직을 달리하는 각급 지방선거에 발휘되는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현직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는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지역주의와 같은 정당요인이 현직의 후보요인보다 당락이나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지만,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선거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더라도 당락에 미친 현직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보다 훨씬 큰 데 비하여,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의 영향은 특히 광역의원선거에서 가장 강했다. 민주당 후보의 높은 당선확률이나 한나라당 후보와의 비교우위는 지방선거의 특징인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그로 인한 제1야당의 반사이익이 광역의원선거에서 매우 큰 것이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이러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나 지역주의의 영향이 가장 약한 대신 광역의원선거보다 현직효과가 강한 차이를 보였다. 득표율에 미치는 현직효과도 지방의원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훨씬 컸으며,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은 광역의원선거에서 가장 크고 기초의원선거에서 가장 약했다.

또한 현직의 교차변수들은 선거유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랐지만, 현직과 비현직 후보 간의 당선율이나 득표율 차이가 주요정당 소속보다는 군소정당/무소속이, 소속정당의 지지지역보다 비(非)지지지역에서,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곳에서 컸던 점은 후보 인지의 영향이 큰 조건에서 현직효과가 더 강하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다. 끝으로 후보의 사회경제학적 변수는 단체장보다 지방의원 선거, 특히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높은 학력과 낮은 연령, 그리고 여성에 대한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종합하면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는 단체장선거가 지방의원선거보다 크고, 지방의원 중에는 기초가 광역보다 컸던 것은 전자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후자는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선율이나 득표율의 이러한 현직효과는 현직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급 선거에서 현직후보가 지닌 인지효과의 차이뿐 아니라 소속정당이나 지역, 도시유형에 따라 현직후보가 누리는 인지적 이점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는 비록 중앙정치 영향과 정당지지의 장기적 요인이 지배적인 현실이지만 지방적인 차원의 단기적인 후보 요인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현직효과가 현직후보의 인지적 이점뿐 아니라 공직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를 반영한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해 볼 때(황아란, 1999; 이곤수·김영중, 2010), 후보의 개인적 역량이 중시되어 나타나는 지방선거의 현직효과는 공직수행의 전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공고화에 필요한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일 수 있다.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현직의 인지효과가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 인지수준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비교적 뚜렷하다. 첫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획득과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보름 남짓한 선거기간 동안 치러지는 1인8표제의 동시 지방선거는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후보 인지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선거제도는 특히 단체장선거로의 편향된 관심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인지적 한계가 정당에 의존한 투표선택을 낳고, 1당 독점을 야기하는 정당 일괄투표 현상 역시 제도적으로 동원된 투표참여에 의한 무지의 투표선택이 만들어 낸 심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선거의 분리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거기간을 포함한 선거운동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후보의 경력이나 학력, 공약 등에 대해 유권자가 쉽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의 작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 검증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요구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직후보의 공직수행과 공약이행에 대한 검증이 정당의 재공천 과정에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을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현직의 교체율이 심각한 수준인 이면에는 재출마가 적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현직의 재공천 문제와 맞물려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

직의 업적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재공천의 중요한 기준이 될 때 민주제의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공천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메니페스토 중심의 공천 경쟁의 장으로 경선제도를 부활시켜 의무화하고, 현직의 공약이행 평가를 포함한 공천후보 선정 절차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정당공천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합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현직효과 분석은 탐색적인 시도로 2010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하여 현직효과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피는 한편, 현직후보의 득표율 증감이나 당선경쟁도 분석으로 현직의 효과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전후보들이 지닌 경력이나 선거운동자원을 모형분석에 포함함으로써 현직의 배제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현직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미시적 접근으로 현직의 인지효과와 공직수행과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많은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는 특히 후보의 개인적 역량과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직효과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중·김형준.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105-127.
- 김옥.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9.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9(2): 1-31.
- 윤종빈. (2002). 국회의원 선거구민의 관계 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4): 177-193.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145-164.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61.
- 이근수·김영중. (2010).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355-371.
- 이남영. (1996). 한국 국회의원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정당·선거·여론』. 서울: 한울.
- 임성학.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39(2): 195-215.
- 정준표. (2007). 5·31 기초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효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한국정당학회보』, 69(2): 29-63.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73-99.
- 황아란. (1998).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 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163-186.
- 황아란. (1999). 6·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황아란. (2006).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22(2): 1-28.
- 황아란. (2008). 선거환경 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제18대 총선에서 영남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7(2): 83-109.
- 황아란. (2010a).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20(2): 31-53.
- 황아란. (2010b). 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초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4(1): 107-124.

- 황아란. (2011).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45(4): 283-299.
- Abramowitz, A., B. Brad, and G. Matthew. (2006). Incumbency, Redistrict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8(1): 75-88.
- Ashworth, S. and E. Bueno de Mesquita. (2008). Electoral Selection, Strategic Challenger Entry,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Journal of Politics*, 70(4): 1009-1025.
- Ansolabehere, S. and J. Snyder. (2002).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 1942-2000. *Election Law Journal*, 1(3): 315-338.
- Banks, J. and R. Kiewiet. (1989). Explaining Patterns of Candidate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4): 997-1015.
- Box-Steffensmeier, J., D. Kimball, S. Meinke, and K. Tate. (2003). The Effect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n the Electoral Advantages of House Incumben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3): 259-270.
- Caldeira, G. and S. Patterson. (1982). Bringing Home the Voters: Electoral Outcomes in State Legislative Races. *Political Behavior*, 4(1): 33-67.
- Campbell, J. (2003). Campaign Financing and the Stagnation of Congressional Elections. In *Life After Reform: Foreseeing 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in Practice*, eds. M. Malbin and R. Kolodn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p.141-158.
- Cox, G. and J.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497.
- Coyne, K. and J. Fund. (1992). *Cleaning House: America's Case for Term Limits*. Washington: Regnery Gateway Press.
- Erikson, R. (1971).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y*, 3(3): 395-405.
- Fiorina, M. (1989). *Congress,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oidel, R. and D. Gross. (1994). A System Approach to Campaign Finance in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Quarterly*, 22: 125-153.

- Gordon, S., G. Huber, and D. Landa. (2007). Challenger Entry and Voter Learn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 303-320.
- Jacobson, G. (1980).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son, G. (1987). The Marginals Never Vanished: Incumbency and Competition in Elections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52-8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126-141.
- Jacobson, G. (1989). Strategic Politicians and the Dynamics of House Elections, 1946-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3):773-793.
- Kazee, T. (1983). The Deterrent Effect of Incumbency on Recruiting Challengers in U.S. Hous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8(3): 469-480.
- Lewitt, S. and C. Wolfram. (1997). Decomposing the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Ho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2(1): 45-60.
- Lyons, M. and P. Galderisi. (1995). Incumbency, Reapportionment and U.S. House Redistrict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8(4): 857-871.
- Mann, T. (1978). *Unsafe at Any Margin: Interpreting Congressional E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Mahyew,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 Quattrone, G. and A. Tversky. (1988). Contrasting Rational and Psychological Analyses of Politic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3): 719-736.
- Stokes, D. and W. Miller. (1966). Party Government and the Saliency of Congress. In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A. Campbell, P. Converse, W. Miller, and D. Stokes. New York: Wiley.
- Stone, W., S. Maisel and C. Maestas. (2004). Quality Counts: Extending the Strategic Politician Model of Incumbent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479-495.
- Yiannakis, D. (1981). The Grateful Electorate: Casework and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568-580.

